

제43회 사법시험 및 제15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시험

응시번호	
성명	

【 시험과목 】

제 2 선택	노동법 (사회보장법포함)
--------	------------------

문제책형
2

시험관리관확인

1 쪽

문 1. 현행법상 파업권이 인정되는 자는?

- ① 청원경찰
- ② 국립의료원에서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
- ③ 사용자단체
- ④ 공무원직장협의회
- ⑤ 초등학교 교원

문 2. 국제노동기구(ILO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ILO는 베르사이유 평화조약에 의하여 국제연맹의 산하단체로 창설되었다
- ② 협약 및 권고의 채택은 총회대표 2/3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
- ③ ILO는 UN 회원국만이 가입할 수 있으며 우리 나라는 1991년 12월 9일자로 가입하였다
- ④ ILO는 정부대표 2인, 노사대표 각 1인이 대표로 참석한다
- ⑤ 필라델피아 선언은 ILO의 목적과 목표에 관한 선언이라고 불리우고 있다

문 3. 다음 중 개별적근로관계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

- ① 근로기준법
- ②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
- ③ 남녀고용평등법
- ④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
-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문 4. 우리 헌법상 노동기본권에 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가는 사회적·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
- ②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결권·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
- ③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
-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, 고용·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
- 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·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

문 5.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근로기준법에서 그 요건이 법정화 되기 이전에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었다
- ②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·인수·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
- ③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
- ④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
- ⑤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

문 6. 퇴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최우선변제의 효력이 인정된다
- ② 임시직으로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
- ③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
- ④ 사용자가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
- ⑤ 근로자가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한 때에 사용자가 반드시 이에 응할 필요는 없다

문 7. 근로계약종료 후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임금청구권이나 재해보상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 후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는 여전히 존속한다
- ② 근로관계의 종료 후에 근로자는 그가 보관했던 물품을 반환하고 회사서류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
-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금품청산의무가 발생하며,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
- ④ 금품청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
-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사용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즉시 교부하여야 하며,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는 사항일지라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한다

문 8. 근로기준법 제21조상의 단시간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
- ②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3할 이상 짧은 근로자
- ③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
- ④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3할이상 짧은 근로자
- ⑤ 1주간의 실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

문 9.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전체적으로 효력이 없다
-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
- ③ 사용자는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쇄하지 못한다
- ④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
- ⑤ 근로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

- 문 10. 여자와 연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15세 미만의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로 채용될 수 없다
 - ② 18세 미만의 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연소자증명서를 비치하여야 한다
 - ③ 여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·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
 - ④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
 - ⑤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다

- 문 11. 근로기준법 소정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?
- ① 장해보상
 - ② 퇴직금
 - ③ 휴업수당
 - ④ 해고예고수당
 - ⑤ 장의비

- 문 12.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노사협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
 - ②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
 - ③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
 - ④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
 - 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

- 문 13. 해고시에 해고예고가 필요한 근로자는?
- ① 수습사용중의 근로자
 - ②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
 - ③ 단시간근로자
 - ④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
 - ⑤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

- 문 14.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(이에 준하는 것 포함)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, 1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각각 실시한다
 - ②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
 - ③ 1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6시간을,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
 - ④ 임신중인 여자 근로자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없다
 - ⑤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

- 문 15.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을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
 - ② 판례는 직접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채권의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다
 -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등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금기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
 - ④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
 - 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

- 문 16. 근로기준법상 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월·연차유급휴가권을 포기하게 해서는 안된다
 - ② 월차유급휴가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진다
 - ③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
 - ④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 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은 존속한다
 - ⑤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에 따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

- 문 17. 근로기준법상 시간외의 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야간근로라 함은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
 - ② 연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, 1주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.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,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
 - ③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1일에 2시간, 1주일에 6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킬 수 있다
 - ④ 여자근로자의 야간근로에는 그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필요로 한다
 - ⑤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

- 문 18.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옳게 연결된 것은?
- | | 보존기간 | 소멸시효 |
|---|------|------|
| ① | 1년 | 1년 |
| ② | 1년 | 3년 |
| ③ | 1년 | 10년 |
| ④ | 3년 | 3년 |
| ⑤ | 3년 | 10년 |

문 19.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 사용자는 해고회피방법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통보시기는?

- ① 협의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
- ② 협의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
- ③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
- ④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
- ⑤ 현행법상 제한은 없다

문 20.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관계없는 것은?

- ① 일반적 구속력
- ② 여후효
- ③ 평화조항
- ④ 근로조건
- ⑤ 강행적 효력

문 21.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조정기간의 연장
- ② 특별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
- ③ 사적조정제도 부인
- ④ 긴급조정의 대상
- ⑤ 직권중재제도의 인정

문 22. 노동조합의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

- ① 사용자의 이익대표자가 가입한 경우
- ② 노동조합 운영경비를 주로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
- ③ 최소한의 규모의 조합사무소를 사용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
- ④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- ⑤ 주로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
문 23.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노사쌍방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
- ②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
- ③ 근로자 개인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
- ④ 단체교섭의 결과 합의가 성립하면 사용자는 이를 단체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
- ⑤ 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

문 24.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는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체협약이 된다
- ②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
- ③ 2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체협약이 된다
- ④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단체협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
- ⑤ 종전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따른다

문 25.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개시된 이후에만 적법하게 행할 수 있다
- ② 적법한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
- ③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위하여 근로자를 새로이 파견받아 대체사용할 수 있다
- ④ 하나의 사업에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체사용할 수 있다
- ⑤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하여 도급을 줄 수 없다

문 26.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중 긴급이행명령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긴급이행명령을 내린다
- ②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인정된다
- ③ 법원의 긴급이행명령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에 처한다
- ④ 긴급이행명령의 내용은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다
- 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긴급이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

문 27.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제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?

- ① 규약의 제정
- ② 규약의 변경
- ③ 조직형태의 변경
- ④ 합병에 관한 사항
- ⑤ 임원의 선거

문 28. 다음의 사용자의 행위 중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

- ①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조회시간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
- ②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동조합의 전임자를 단체협약으로 인정하는 행위
- ③ 채용시 노동조합에 가입은 하되 조합비는 납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요구하는 행위
- ④ 노동조합의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합리적 설명이나 관련자료의 제공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는 행위
- ⑤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인 근로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직위로 승진시키는 행위

문 29.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노동조합규약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취할 수 있는 조치는?

- ① 위법한 내용에 대해서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
- ② 위법한 내용에 대해서만 그 취소를 명할 수 있다
- ③ 위법 및 부당한 내용에 대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
- ④ 위법 및 부당한 내용에 대해 그 취소를 명할 수 있다
- ⑤ 위법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취소를, 부당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

문 30. 다음의 근로자 중 **현행법상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**를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
- ㄴ. 취업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월급제 근로자
- ㄷ. 단시간근로자
- ㄹ. 공립 고등학교 교사
- ㅁ. 정부출연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

- ① $\neg, \perp, \top, \bot$ ② $\neg, \perp, \top, \square$
 ③ $\neg, \perp, \top, \square$ ④ $\perp, \top, \bot, \square$
 ⑤ $\neg, \perp, \top, \bot, \square$

문 31.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사적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사적조정(調停)은 허용되지만 사적중재는 허용되지 않는다
- ② 노동관계당사자는 사적조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행정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
- ③ 사적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내용은 임의적 합의에 불과할 뿐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
- ④ 사적조정절차는 공적조정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채택할 수 있다
- ⑤ 사적조정기간 경과 후 공적조정절차를 거쳐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

문 32.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은?

- ① 전기사업 ②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
③ 조폐사업 ④ 공중위생사업
⑤ 방송사업

문 33.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완·반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까지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는가?

- ① 즉시 ② 1일 이내
③ 3일 이내 ④ 7일 이내
⑤ 10일 이내

문 34.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
- ② 노사협의회의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
- ③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
- ④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의 활동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
- ⑤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의결 사항이다

문 35.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
- ②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
- ③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의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한다
- ④ 육아휴직은 근로여성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
- ⑤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근로여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차별대우가 아니다

문 36.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결정권자는?

- ① 노동부장관
- ② 기획예산처장관
- ③ 노동위원회
- ④ 국무총리
- ⑤ 대통령

문 37. 특정한 사항을 관장하는 특별노동위원회는 누구의 소속하에 두는가?

- ① 노동부장관
- ② 보건복지부장관
- ③ 대통령
- ④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
- ⑤ 국무총리

문 38.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‘업무상의 재해’로 볼 수 없는 것은?
(이건이 있을 경우 판례에 따름)

- ① 통근버스를 이용한 출퇴근 중의 사고
- ② 시업(始業)시간 전 업무준비행위 중의 사고
- ③ 조회·종례 중의 사고
- ④ 작업시간 중 용변 등 생리를 위한 행위 중의 사고
- ⑤ 중식시간 중 노동조합이 주최한 체육대회 중의 사고

문 39. 사회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

-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
- ② 국민연금법
- ③ 국민건강보험법
- ④ 고용보험법
-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

문 40.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

- ① 질병 ② 장애
③ 노령 ④ 사망
⑤ 도산

제43회 사법시험 및 제15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시험

응시번호		【 시험 과 목 】		문제책형	시험관리관확인	
성명		제 2 선택	국 제 법 (국제경제법포함)	2		1 쪽

- 문 1. 1951년 영국과 노르웨이간 어업사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(ICJ)의 판결은 국제법 어느 부분의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는가?
- ① 직선기선의 설정
 - ② 공해어업의 자유
 - ③ 대륙붕의 경계확정
 - ④ 경제수역의 경계확정
 - ⑤ 국제해협의 통항
- 문 2. 오늘날 주장되고 있는 ‘명시적 정부승인’ 불필요론의 기초가 된 것은?
- ① Tobarism
 - ② Estrada doctrine
 - ③ Hallstein doctrine
 - ④ Porter doctrine
 - ⑤ Stimson doctrine
- 문 3. 세계무역기구(WTO) 분쟁해결제도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- ① 非司法的 분쟁해결방법의 배제
 - ② 패널절차의 단계별 시한설정
 - ③ 규칙지향적 접근방식의 채택
 - ④ 분쟁해결체제의 통합과 일원화
 - ⑤ 上訴制度의 도입
- 문 4. UN헌장 제18조 제2항의 ‘중요문제’를 결정하는 의결정족수는?
- ① 재적회원국의 과반수
 - ② 출석하고 투표한 회원국의 과반수
 - ③ 회원국의 전원일치
 - ④ 출석하고 투표한 회원국의 3분의 2
 - ⑤ 재적회원국의 3분의 2
- 문 5.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조약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?
- ① 규정(statute)
 - ② 의정서(protocol)
 - ③ 교환각서(exchange of notes)
 - ④ 신사협정(gentlemen’s agreement)
 - ⑤ 합의의사록(agreed minute)
- 문 6. 국제사법재판소(ICJ)에 의한 재판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?
- ① 선택조항 수락국가의 증가
 - ② 선결적 항변의 남용
 - ③ 개인의 당사자 능력 부인
 - ④ 판결의 집행력 취약
 - ⑤ 상소제도의 부재

- 문 7. 국제법상 개인의 지위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점차 개인의 국제법적 지위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
 - ② 유럽사법재판소에서는 개인에게도 제소자격을 인정하고 있다
 - ③ 개인은 전쟁범죄나 해적행위 등을 범하지 않을 국제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
 - ④ 개인은 일반적으로 조약체결권을 가진다
 - ⑤ 세계인권선언에 의하면 모든 개인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
- 문 8. 국제법상 국내문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국가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국제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
 - ② 국가가 주권적으로 존재하는 한, 국내문제는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다
 - ③ 내정뿐만 아니라 외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
 - ④ ‘튀니지-모로코 국적법사건’에서는 국내문제의 내용 또는 범위는 고정적이라고 보았다
 - ⑤ 헌법상의 통치구조 문제는 대표적인 국내문제이다
- 문 9. 국가승인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상대적 효과를 가진다
 - ② ‘법률상 승인’의 경우, 피승인국의 지위에 본질적 변경이 있지 않는 한, 철회할 수 없다
 - ③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가지지 아니한다
 - ④ 창설적 효과설에 의하면 신생국은 승인에 의하여 국제법주체로 된다
 - ⑤ ‘사실상 승인’은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잠정적이다
- 문 10. 국내적 구제완료(exhaustion of local remedies)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- ①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우연히 외국영역에 들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이 원칙은 적용된다
 - ② 이 원칙은 가해국의 주권적 입장과 재판관할권을 존중하려는 것이다
 - ③ 국내적 구제는 司法的 救濟에 한정될 뿐, 행정적 구제는 제외된다
 - ④ 이 원칙의 적용은 국가간 합의에 의해서도 배제될 수 없다
 - ⑤ 국내적 구제수단에 이용가능성, 유효성 및 실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이 원칙은 적용되어야 한다
- 문 11. 세계무역기구(WTO)내에서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?
- ① 이사회(Council)
 - ② 각료회의(Ministerial Conference)
 - ③ 총회(General Assembly)
 - ④ 무역정책검토기구(Trade Policy Review Body)
 - ⑤ 사무총장(Director-General)

문 12. UN총회의 임무로 볼 수 없는 것은?

- ① 정치적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협력 촉진
- ②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법전화의 장려
- ③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
- ④ UN의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보고에 대한 심의
- ⑤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실현에 있어서의 원조

문 13. 국제사법재판소(ICJ)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임기 9년인 15명의 재판관들로 구성된다
- ② 동일한 국가의 국민 2인 이상이 동시에 재판관이 될 수 없다
- ③ UN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각각 독립하여 재판관을 선출한다
- ④ 재판관단은 그 전체가 세계의 주요 문명형태와 법체계를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
- ⑤ 재판관은 자신의 국적국이 분쟁당사자인 사건의 재판절차에는 참가할 수 없다

문 14. 외교적 보호권(right of diplomatic protection)의 행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내적 구제 완료의 원칙이 적용된다
- ② 국적계속의 원칙이 적용된다
- ③ 칼보(Calvo)조항은 본국의 외교적 보호권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가지는 한, 국제법상 무효로 간주된다
- ④ 외교적 보호권은 국가 자신의 권리이다
- ⑤ 국가는 피해를 입은 자국민이 외교적 보호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없다

문 15. UN해양법협약 제10조 제4항의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에 알맞은 숫자는?

만(bay)의 자연적 입구 양쪽의 저조지점간의 거리가 ____해리를 넘지 않는 경우, 폐쇄선을 두 저조지점간에 그을 수 있으며, 이 안에 포함된 수역은 내수로 본다.

- ① 3 ② 6
- ③ 12 ④ 24
- ⑤ 200

문 16. 세계무역기구(WTO) 체제상 공정무역주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덤핑행위·보조금지급 등과 같은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무역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
- ② 개발도상국은 경제후진국에 대한 특혜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공정무역주의를 주장하고 있다
- ③ 기술장벽협정은 공정무역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무역규범이라 할 수 없다
- ④ 객관적 기준이 결여된 공정성 개념에 입각한 통상규제는 위장된 무역제한조치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
- ⑤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수출국의 공정무역에 대한 수입규제이므로 그 발동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

문 17. 국제사법재판소(ICJ)에서 ‘형평과 선’(aequo et bono)을 재판 준칙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?

- ① 분쟁당사국 일방의 요청
- ②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소장의 재량
- ③ 분쟁당사국의 합의에 의한 요청
- ④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
- ⑤ 어떠한 경우에도 재판준칙이 될 수 없다

문 18. ‘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’에 나타난 ‘조약의 무효원인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(coercion)을 당한 국가는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무효로 하는 것을 원용할 권리를 가진다
- ② 착오(error)의 경우 조약문의 문언에 관한 착오는 제외된다
- ③ 부패(corruption)의 경우 국제예양상 사교의 범위내의 것은 제외된다
- ④ 조약법협약에 열거된 무효원인 이외의 원인으로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
- ⑤ 조약은 그 체결 당시에 국제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경우 무효이다

문 19. 세계무역기구(WTO) 패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패널위원은 정부대표나 기구대표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
- ② 패널은 분쟁당사자가 패널설치로부터 20일 이내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, 표준위임사항을 부여받는다
- ③ 민간인사뿐만 아니라 정부인사도 패널위원이 될 수 있다
- ④ 패널의 심의(deliberations)는 공개되지 아니한다
- ⑤ 분쟁해결기구(DSB)에서 어느 한 회원국이라도 반대하는 경우 패널보고서는 채택될 수 없다

문 20. 국가의 국제책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
- ① 행정기관의 행위만이 국제책임을 야기한다
- ② 교전단체의 국제적 불법행위에 대해 일차적으로 본국의 책임이 성립한다
- ③ 私인(私)의 행위라 할지라도 국가가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국가책임이 발생한다
- ④ 국가는 그 하위기관의 행위에 대하여는 국제책임을 지지 않는다
- ⑤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에 대한 국제책임은 당연히 당해 단체가 진다

문 21. 국제사법재판소(ICJ)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
- ①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이행보장 결의가 있을 때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
- ② 판결의 의의 또는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때, ICJ는 어느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라도 이를 해석하여야 한다
- ③ 선례구속성(stare decisis)의 원칙이 적용된다
- ④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
- ⑤ UN헌장 제94조 제2항은 패소국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승소국이 UN총회에 제소하도록 하고 있다

문 22. 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조약상의 합의가 없는 한,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는 없다
- ② 인도요청국과 피요청국 중 한 국가에서만 범죄로 성립되는 것이면 일반적으로 인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
- ③ 자국민은 인도하지 않는 국가도 있다
- ④ 전쟁범죄를 범한 자는 일반적으로 정치범으로 간주된다
- ⑤ 일반적으로 중한 범죄가 인도의 대상이 된다

문 23. 외국인이 외국에서 자국민에게 행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피해자가 자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할권 원칙은?

- ① 주관적 속지주의 ② 객관적 속지주의
- ③ 수동적 속인주의 ④ 효과이론
- ⑤ 보편주의

문 24. 세계무역기구(WTO)체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
- ① 관세양허를 부인한다
- ② WTO로부터의 탈퇴를 허용하지 않는다
- ③ 多者主義를 배제하였다
- ④ 최혜국대우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
- ⑤ 규율대상 및 시장개방의 범위가 확대되었다

문 25. 국가승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우호통상항해조약의 체결은 묵시적 국가승인으로 간주된다
- ② 외교관계의 수립은 묵시적 국가승인으로 간주된다
- ③ 외교관계의 단절이 반드시 국가승인의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
- ④ 통상대표부의 설치만으로는 묵시적 국가승인으로 간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
- ⑤ 조건부로 승인하였을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승인은 무효로 된다

문 26. 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
- ① 지역적 관습법은 허용되지 않는다
- ② 국제 강행규범은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일반국제법의 사후규범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다
- ③ 조약은 관습법보다 상위의 효력이 인정된다
- ④ 조약이나 관습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법의 일반원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
- ⑤ 국제법규간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

문 27.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私人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재류국의 재관관할권에 복종한다
- ② 재류국은 외국인의 생명, 재산을 보호할 국제법상 의무를 부담한다
- ③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국제관습법적 의무를 부담한다
- ④ 재류국은 외국인에 대하여 특정한 국내공법상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
- 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, 외국인은 재류국에서 출국할 자유를 가진다

문 28. UN헌장 제102조 제2항에 따를 때 사무국에 등록되지 아니한 조약은 누구에 대하여 원용할 수 없는가?

- ① 모든 국가 ② 타방 조약당사국
- ③ 모든 UN기관 ④ 모든 UN회원국
- ⑤ 모든 국제재판소

문 29. 세계무역기구(WTO) 분쟁해결절차에서 협정위반사실이 판정된 피제소국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, 제소국이 취할 수 있는 보복조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제소국은 자국의 국내통상법에 의한 일방적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
- ② 제소국은 분쟁해결기구(DSB)의 승인을 받아 자국의 양허를 정지할 수 있다
- ③ 분쟁해결기구는 역충의제(reverse consensus)에 의해 양허의 정지를 승인할 수 있다
- ④ 보복조치는 협정위반이 인정된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
- ⑤ 피제소국이 서비스무역일반협정을 위반하였다고 판정된 경우, 피해국은 상품무역에 관한 자국의 양허를 정지할 수도 있다

문 30. 1950년 UN총회가 채택한 ‘평화를 위한 단결결의’(Uniting for Peace Resolution)는 어떤 기관의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채택되었는가?

- ① 총회
- ② 안전보장이사회
- ③ 경제사회이사회
- ④ 국제사법재판소
- ⑤ 신탁통치이사회

문 31. 영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영해에는 연안국의 주권이 미친다
- ② 영해에서 무해통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의 잠수함은 해면 위로 부상하여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하여야 한다
- ③ UN해양법협약상 영해의 폭은 12해리까지 인정하고 있다
- ④ 우리나라는 전 연안에서 12해리 영해를 선포하고 있다
- ⑤ 무해통항중인 외국선박의 선내에서 행해진 범죄에 관해서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旗國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

문 32. 국가의 권리·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의무는 국제사법재판소가 강제관할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
- ② 오늘날 무력사용뿐만 아니라 무력사용의 위협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
- ③ UN헌장 제51조에 의하면 집단적 자위권도 국가의 고유한 권리에 속한다
- ④ 국가는 자국에게 유효하게 부과된 국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
- ⑤ 국제관계에서 모든 국가는 법적으로 평등하다

문 33.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방식이 아닌 것은?

- ① 비준(ratification)
- ② 수락(acceptance)
- ③ 승인(approval)
- ④ 인증(authentication)
- ⑤ 약식조약에 대한 서명(signature)

문 34. UN헌장 제51조의 자위권행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무력공격(armed attack)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있다
- ② 자위권은 UN헌장이 인정한 제도이므로 UN 회원국만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다
- ③ UN회원국은 자위권의 행사 즉시 UN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
- ④ UN 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
- ⑤ UN에서 자위권발동을 통제하는 기관은 안전보장이사회이다

문 35. 국제사법재판소(ICJ)의 재판절차에서의 선결적 항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ICJ의 관할권 부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
- ② 국내적 구제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선결적 항변사유가 될 수 있다
- ③ 선결적 항변이 제기된 경우, 타방 당사국은 이것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해명할 수 있다
- ④ 선결적 항변은 그 근거가 되는 사실 및 법을 명시하여 제기하여야 한다
- ⑤ 제기된 선결적 항변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, 그 항변사유 모두가 인정되어야 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부인된다

문 36. 조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조약의 유보제도는 다자조약의 성립을 용이하게 하고, 보다 많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이다
- ② 조약은 공식적으로 발효되기 이전이라도 일부 당사국간에 잠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
- ③ 조약은 그 문맥과 목적에 비추어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
- ④ 조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, 구두 조약의 존재도 인정된다
- ⑤ 조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질 수 없다

문 37. 배타적 경제수역(EEZ)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저 및 하층토는 물론 상부수역에 있는 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
- ②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어업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을 가지는 동시에 생물자원을 보존·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
- ③ 연안국은 모든 섬에 대해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
- ④ 대항국 또는 인접국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확정은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하고, 합의가 안되면 UN해양법협약상의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한다
- ⑤ 배타적 경제수역 상공에서 타국은 비행의 자유를 누린다

문 38. 국제사법재판소(ICJ)의 쟁송사건 관할권(contentious jurisdiction)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원칙적으로 국가간의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
- ② 확대관할권(forum prorogatum)은 인정되지 아니한다
- ③ 국가들은 ICJ규정 제36조 제2항에 따라 ICJ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할 수 있다
- ④ 관할권 존부에 관한 다툼은 ICJ의 결정에 의하여 해결된다
- ⑤ 국제기구와 개인은 쟁송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

문 39.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절차사항에 관한 것은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
- ② 강제조치에 관한 ‘결정’은 그 조치의 대상이 되는 국가에게만 구속력을 가진다
- ③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결의는 원칙적으로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
- ④ 절차사항은 최소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결정된다
- ⑤ ‘절차사항 이외의 모든 사항’에 관한 결정에는 거부권이 적용된다

문 40. 국가의 국제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가가 국제법을 위반한 경우 전통적으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모두를 지도록 되어 있다
- ② 연방국가의 구성국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방 국가 자체가 국제책임을 진다
- ③ 과실책임의 원칙이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왔으나, 근래 원자력이나 우주공간의 이용에 관하여 무과실책임이 적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
- ④ 사법기관이 외국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거부하여 ‘재판의 거부’(denial of justice)에 해당하는 경우, 국가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
- ⑤ 손해배상, 원상회복, 사과 등에 의하여 국가책임이 해제된다

응시번호		【 시험과목 】	문제책형	시험관리관확인
성 명		제 2 선택 국제거래법	2	

1 쪽

- 문 6. 특수한 신용장들의 의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- ① 연쇄신용장(back-to-back L/C)은 일정기간 신용장 금액이 자동적으로 갱신되도록 하는 신용장이다
 - ② 확인신용장(confirmed L/C)은 개설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이 수익자에 대하여 신용장 대금의 지급 등을 확인하는 문언이 삽입된 신용장이다
 - ③ 연지급신용장(deferred payment L/C)은 수출업자가 수입상을 신뢰하고 물품대금의 지급을 일정기간 유예해 주는 신용장이다
 - ④ 선불신용장(red clause L/C)은 개설은행이나 통지은행으로 하여금 선적서류가 제시되기 전에 미리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문언이 삽입된 신용장이다
 - ⑤ 양도신용장(transferable L/C)은 수익자가 신용장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신용장이다

문 7.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물품의 중량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도록 한 경우에, 이에 의심이 있을 때에 대금산정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?

 - ① 총중량
 - ② 포장포함 중량
 - ③ 포장의 중량을 제외한 내용물의 중량
 - ④ 사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 중량
 - ⑤ 컨테이너포함 총중량

문 8.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청약과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- ① 청약의 효력발생은 도달주의에 의한다
 - ② 취소불능인 청약이라도 그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
 - ③ 청약은 승낙기간이 있든 없든 피청약자가 이를 거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
 - ④ 단순한 침묵 또는 부작위 그 자체만으로는 승낙이 되지 않는다
 - ⑤ 청약과 승낙의 표시내용에 관하여 전통적인 영미법상의 mirror image rule(완전일치의 원칙)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

문 9. 요크-안트워프규칙(York-Antwerp Rules, 1990)이란 무엇에 관한 통일규칙인가?

① 선하증권	② 공동해손
③ 선박충돌	④ 해상물품운송계약
⑤ 복합운송	

문 10. Incoterms 2000의 CIF계약에서 매도인이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서류로 상업송장, 보험증권 이외에 요구되는 서류는?

① 선하증권	② 검사증명서
③ 항공운송장	④ 원산지증명서
⑤ 품질증명서	

문 11. Incoterms 2000의 특징이 아닌 것은?

- ① 무역관습상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
- ② FAS에서 수출통관의 수행과 수출관세의 지급의무를 매수인으로 부터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변경하였다
- ③ Incoterms 2000상의 FOB를 미국통일상법전상의 FOB의 내용과 일치시켰다
- ④ FCA에서 운송방식에 따라 인도완성시점이 다양하던 것을 두가지의 인도장소로 구분하여 인도완성시점을 정했다
- ⑤ DEQ에서 수입통관의 수행과 수입관세의 지급의무를 매도인 으로부터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변경하였다

문 12. 국제거래 관습의 존재와 변화를 조사하고 그 정형화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기구는?

- ① IMF(International Monetary Fund)
- ② ICC(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)
- ③ WTO(World Trade Organization)
- ④ WIPO(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)
- ⑤ ICJ(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)

문 13. 항공운송에 관한 바르샤바체제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?

- ① 협약 체결국간의 국제항공운송
- ② 국제항공운송인
- ③ 국제항공운송화물수하인
- ④ 순수 국내항공운송
- ⑤ 국제항공운송인의 이행보조자

문 14.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매도인이 특정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, 물품의 운송이 매매계약에 포함된 때에 물품인도의 장소는?

- ① 매도인의 영업소
- ② 매수인의 영업소
- ③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영업소
- ④ 제1의 운송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하는 장소
- ⑤ 당사자가 알고 있는 목적물의 현소재지

문 15.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석유나 광석같은 물품이 운송중에 매도된 경우에 원칙적인 위험의 이전시기로 옳은 것은?

- ① 계약을 체결한 때
- ② 목적물을 인도한 때
- ③ 제1운송인에게 교부한 때
- ④ 목적물을 수령한 때
- ⑤ 계약을 이행하는 때

문 16. 다음 중 중세 상인법시대에 발전된 제도가 아닌 것은?

- ① 환어음
- ② 선하증권
- ③ 상사회사
- ④ 해사관습법
- ⑤ 보증신용장

문 17.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서류조사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?

- ① 제출된 서류의 위조성·형식성·충분성 여부
- ② 신용장의 유효기간의 일치여부
- ③ 어음금액·송장금액·신용장금액의 상호 일치여부
- ④ 상품의 명세·단가 및 수량 등의 기재의 일치여부
- ⑤ 보험서류의 종류 및 담보조건과 신용조건의 일치여부

문 18.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에서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수단에 속하지 않는 것은?

- ① 특정이행청구권
- ② 물품명세의 확정권
- ③ 부가기간지정권
- ④ 계약해제권
- ⑤ 대금감액청구권

문 19.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주식의 매매
- ② 선박의 매매
- ③ 항공기의 매매
- ④ 석유의 매매
- ⑤ 전기의 매매

문 20. 국내거래와 비교하여 국제거래가 가지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제적 관습 내지 관행의 성립
- ② 국제상사분쟁의 다발
- ③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법원의 존재
- ④ 법규의 유사성과 통일지향성
- ⑤ 거래상대방의 다양성

문 21. “사람의 능력은 그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”(섭외사법 제6조) 라는 규정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?(통설에 의함)

- ① 연령에 따른 능력만을 대상으로 하고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의 능력은 포함하지 않는다
- ② 행위능력 중에서도 신분적 행위에 관한 능력은 이 규정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
- ③ 처가 무능력자가 되는가의 여부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
- ④ 어음행위능력과 수표행위능력은 재산적 행위능력이므로 본 규정이 적용된다
- ⑤ 본조의 능력은 일반적 행위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

문 22. 상속통일주의(상속단일주의)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상속과 유언의 준거법을 같이하는 주의를 말한다
- ② 재산상속을 부동산상속과 동산상속으로 구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주소지법을 적용하고, 후자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게 하자는 것이다
- ③ 외국에 있는 재산과 내국에 있는 재산의 상속을 구별하지 않는 주의를 말한다
- ④ 물권과 채권을 구별하지 않는 주의를 말한다
- ⑤ 동산상속이든 부동산상속이든 구별하지 않고, 상속을 피상속인의 속인법에 의하게 하자는 것이다

문 23.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은 어느 준거법에 의해야 하는가?(통설에 의함)

- ① 법인의 속인법
- ② 피해자의 주소지법
- ③ 피해자의 본국법
- ④ 법정지법
- ⑤ 불법행위지법

문 24. 'Gretna Green Marriage'와 관련 있는 것은?

- ① 법률의 회피
- ② 영사혼
- ③ 일부다처제
- ④ 반정
- ⑤ 적응문제

문 25.涉外사법상 상사회사의 행위능력의 준거법은?

- ① 설립준거법
- ② 영업소소재지법
- ③ 대표이사의 본국법
- ④ 법률행위지법
- ⑤ 대표이사의 주소지법

문 26. 물권변동의 원인이 되는 사실, 즉 법률요건이 미완성인 채로 목적물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, 물권변동의 준거법은?

- ① 법정지 법원이 결정하는 법
- ②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 법
- ③ 당사자에게 유리한 소재지의 법
- ④ 법률요건이 시작된 당시 목적물의 소재지법
- ⑤ 법률요건이 완성될 당시 목적물의 소재지법

문 27. 현행법상 외국판결의 승인 집행의 요건이 아닌 것은?

- ① 외국에서의 판결이 사기로 얻어진 것이 아니한 일
- ② 법령이나 조약으로 외국법원의 재판권을 부인하지 아니한 일

- ③ 패소한 피고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개시에 필요한 소환이나 명령의 송달을 받은 일 또는 받지 아니하고 응소한 일
- ④ 외국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아니한 일
- ⑤ 상호의 보증이 있는 일

문 28. 연결소(연결점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연결소는涉外적 법률관계와 이를 규율할 준거법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
- ② 연결소에는 단순한 사실인 것도 있고 그 의미가 법률에 의해 규정되는 것도 있다
- ③ 연결소는 본국법과 법정지법을 연결하는 요소이다
- ④ 연결소 가운데 단순한 사실관계인 것은 목적물의 소재지나 법정지를 들 수 있다
- ⑤ 서명지나 발행지는涉外사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연결소이다

문 29.涉外사법상 어음·수표에 관한 그 준거법의 연결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약속어음의 소구권 행사기간 - 발행지법
- ② 어음·수표의 상실 또는 도난의 경우 권리회복 절차 - 지급지법
- ③ 약속어음의 발행인의 의무의 효력 - 지급지법
- ④ 약속어음의 일부 지급 - 서명지법
- ⑤ 수표로부터 생긴 의무의 효력 - 서명지법

문 30. 베를린에 주소를 둔 한국인 甲男이 프랑스인 乙女와 덴마크에서 혼인하였을 경우涉外사법상 그 효력을 정하는 준거법은?

- ① 한국법
- ② 프랑스법
- ③ 독일법
- ④ 덴마크법
- ⑤ 당사자가 선택한 법

문 31. 사무관리의 준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통설에 의함)

- ① 사무관리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문제는 사무관리지법이 결정한다
- ② 사무관리로서 행한 행위가 채권행위인 경우 그 채권행위의 효력의 준거법은 행위지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
- ③ 사무관리로서 행한 행위가 물권행위인 경우 그 물권행위의 효력은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
- ④ 해난구조계약에 의하여 해난구조를 한 경우 사무관리가 아니므로 보수청구권은 그 구조계약의 준거법에 따른다
- ⑤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하여는 사무관리지법이 결정한다

문 32. 섭외사법상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(통설에 의함)

- ①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의 법에 의하나, 예외적으로 외국에 있는 한국인 남녀 사이의 이른바 영사혼도 인정된다
- ② 신분적 법률행위처럼 성립과 효력의 준거법이 다른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방식은 성립의 준거법에 따른다
- ③ 행위지법에 의하여 한 법률행위 방식도 유효하다
- ④ 단독행위의 방식은 의사표시를 발한 곳의 법에 의한다
- ⑤ 어음행위의 방식은 서명지의 법에 의한다

문 33. 국제사법 학설사에 있어서 19세기의 영미학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?

- ① 속지주의적 경향이 강한 점
- ② 속인법에 관해서는 주소지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
- ③ 민족주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점
- ④ 판례법을 중시하고 있는 점
- ⑤ 외국법 적용의 근거를 국제예양에 두는 점

문 34. 계약의 준거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당사자의 계약능력은 법률행위능력의 문제로서 행위능력의 준거법에 따라 정하여진다
- ② 청약의 구속기간, 연착된 승낙의 효력 등은 계약준거법에 의한다
- ③ 채무이행지법에 의할 것을 당사자가 합의한 때에 상품급부의무의 이행지와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지가 서로 다른 경우 저촉법적 지정이라고 본다면 각자의 준거법이 달라진다
- ④ 위약금에 대하여는 본계약과 독립된 준거법을 갖는다
- ⑤ 동시이행의 항변, 위험부담 등의 문제는 본계약의 준거법에 의한다

문 35. 섭외사법상 외국인이 한국에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능력의 준거법은?

- ① 본국법
- ② 주소지법
- ③ 행위지법
- ④ 법정지법
- ⑤ 목적물의 소재지법

문 36. 외국법 적용의 근거에 관한 국제예양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Ulrich Huber는 영토주권을 기초로 국제예양론을 제기하였다
- ② Joseph Story에 의하면, 국제예양은 각국 상호간에 유용하며 상대국이 똑같은 정의를 자국에 행하도록 자국도 그 정의를 상대국에 행하여야 할 윤리적 필요성에서 인정된다고 한다
- ③ 국제예양론은 정의를 행할 의무의 근거를 준다고 한다
- ④ 국제예양론은 어떤 외국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없다
- ⑤ 국제예양론은 섭외사건에 대하여 편협한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국제주의적인 전망을 하도록 도왔다는 평가를 받는다

문 37. 법관이 외국법을 적용해야 할 때에 그 법률을 적용하지 않았다는가 또는 그것을 잘못 적용하였을 경우의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甲국법을 적용해야 할 때, 내국법을 적용하였다는가 乙국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내국국제사법규정 자체를 위반한 것이므로 당연히 상고이유가 된다
- ② 외국의 실질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A규정을 적용해야 할 때 B규정을 적용한 경우, 외국법을 사실로 보는 견해에서는 상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
- ③ 외국의 실질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적용할 규정의 해석을 잘못된 경우, 외국법을 사실로 보는 견해에서는 상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
- ④ 소송상 외국법을 사실로 보는 견해에서는 외국법 내용의 확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, 법률심인 최고법원에서는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
- ⑤ 소송상 외국법을 사실로 보는 견해에서는 당사자가 외국법을 증명·원용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것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

문 38. 섭외사법 제12조의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통설에 의함)

- ① 섭외사법은 동산·부동산 통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
- ② 점유자의 과실의 반환의무의 유무 여부는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
- ③ 공업소유권이나 무체재산권은 섭외사법 제12조의 물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
- ④ 섭외사법 제12조의 ‘등기하여야 할 권리’에는 부동산환매권이나 부동산임차권과 같은 채권도 속한다
- ⑤ 유실물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

문 39. 반정주의를 지지하는 학설 중 ‘끝없는 순환론’에 빠지게 된다는 비판을 받는 학설은?

- ① 총괄지정설
- ② 외국의사존중설
- ③ 판결집행설
- ④ 내외규정조화설
- ⑤ 법적 안정설

문 40. 법규의 구별을 법규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에 의해서 구별했으며, 특히 부부재산관계에 관해서 당사자의 의사자치를 주장했던 사람은?

- ① d'Argentré
- ② Dumoulin
- ③ Bartolus
- ④ Paul Voet
- ⑤ Huber

제43회 사법시험 및 제15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시험

응시번호	【 시험과목 】		문제책형	시험관리관확인	
성명	제 2 선택	조 세 법	2		1 쪽

- 문 1. 과세관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하면 원칙적으로 부과처분 기타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없으나, 심판결정이나 판결이 확정 되면 이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일정한 기간은?
- ① 당해 심판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월
 - ② 당해 심판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월
 - ③ 당해 심판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
 - ④ 당해 심판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
 - ⑤ 당해 심판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7년
- 문 2.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?
- ① 기업회계의 존중
 - ② 근거과세의 원칙
 - ③ 신의·성실의 원칙
 - ④ 조세감면의 사후관리
 - ⑤ 실질과세의 원칙
- 문 3. 소득세의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
 - ②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
 - ③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
 - ④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한 때에 수정한 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다
 - ⑤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
- 문 4. 국세기본법상 과세기간의 종료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세목에 해당하는 것은?
- ① 증권거래세
 - ② 상속세
 - ③ 증여세
 - ④ 소득세
 - ⑤ 특별소비세
- 문 5. 국세환급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국세환급금의 청구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
 - ② 국세환급가산금의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
 - ③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
 - ④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에 의한 직권 추당도 인정되고 있다
 - ⑤ 국세기본법상의 국세환급금에는 오납액·초과납부액과 환급세액이 모두 포함된다

- 문 6. 법인세법에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?
- ① 현금주의
 - ② 발생주의
 - ③ 권리의무확정주의
 - ④ 권리의무귀속주의
 - ⑤ 실현주의
- 문 7. 납세의무의 성립·확정 및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부당이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다
 - ②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
 - ③ 상속세는 당해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
 - ④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
 - ⑤ 인지세는 과세대상거래가 확정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
- 문 8.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 연부연납
 - ② 독촉
 - ③ 교부청구
 - ④ 압류
 - ⑤ 납세고지
- 문 9. 국세기본법에서는 동법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수정신고에 대하여는 당초의 신고와 관련하여 부과하여야 할 특정 가산세의 일정부분을 감면해 주고 있다. 이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의 감면비율로 옳은 것은?
- ① 100분의 30
 - ② 100분의 50
 - ③ 100분의 70
 - ④ 100분의 80
 - ⑤ 100분의 100
- 문 10. 국세와 피담보채권 간의 우선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국세의 법정기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에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된다
 -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국세의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된다
 - ③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된다
 - ④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된다
 - ⑤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세액의 부과처분일이 법정기일이 된다

문 11. 특정 법인이 재산의 부족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과점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다. 이러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
- ② 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
- ③ 과점주주는 법인이 납부할 세액 전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
- ④ 대표이사라도 소유주식이 없으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
- ⑤ 법인의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당연히 소멸한다

문 12.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금전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
- ②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보험에 든 등록자산에는 개인승용차가 포함된다
- ③ 세무서장은 국세의 징수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
- ④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 없이도 제공한 담보를 교체·변경할 수 있다
- ⑤ 납세담보는 담보가 확실하여야 하므로 물적담보만이 허용된다

문 13.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승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은?

- ① 법인의 합병
- ② 법인의 청산
- ③ 담보의 제공
- ④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
- ⑤ 물납의 승인

문 14.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국세로만 연결된 것은?

- ① 등록세 — 법인세 — 자동차세 — 지역개발세
- ② 특별소비세 — 교통세 — 부당이득세 — 주세
- ③ 취득세 — 종합토지세 — 주민세 — 인지세
- ④ 담배소비세 — 도축세 — 증권거래세 — 주세
- ⑤ 특별소비세 — 부가가치세 — 농업소득세 — 도시계획세

문 15. 국세기본법에서 납세자권리현장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
납세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?

- ① 세무조사결과에 통지를 받을 권리
- ② 불가피한 경우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권리
- ③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
- ④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
- ⑤ 사전에 과세예고통지를 받을 권리

문 16. 국세기본법상 과세전 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되, 사안에 따라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
- ② 과세전 적부심사는 청구가 강제되지 않는 임의적 구제절차이다
- ③ 과세전 적부심사가 청구된 부분은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
- ④ 납기전 징수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
- ⑤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친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

문 17. 국세에 관한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몇 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?

- ① 20일 이내 ② 30일 이내
③ 60일 이내 ④ 90일 이내
⑤ 180일 이내

문 18. 국세의 불복절차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세청 심사청구 → 행정소송
- ② 심판청구 → 행정소송
- ③ 이의신청 → 국세청 심사청구 → 행정소송
- ④ 이의신청 → 심판청구 → 행정소송
- ⑤ 이의신청 → 국세청 심사청구 → 심판청구 → 행정소송

문 19. 과세관청은 서류의 송달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. 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서류는 납세자에게 직접 교부할 수 있다
- ②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
- ③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
- ④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
- ⑤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

문 20.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을 배제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?

- ①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
- ②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의 작성·교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
- ③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
- ④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비해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⑤ 납기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

문 21. 국세행정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?

- ①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
- ②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
- ③ 과세관청의 부작위처분
- ④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처분
- 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처분

문 22. 소득세법상의 자산소득합산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
- ② 자산소득에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된다
- ③ 부부 중 자산소득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를 주된 소득자로 한다
- ④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된 배우자의 자산소득은 당해 배우자의 소득계산에서 제외된다
- ⑤ 자산소득합산과세에서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

문 23.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은?

- ① 출자의 감소
- ② 퇴사 또는 탈퇴
- ③ 법인의 해산
- ④ 법인의 합병
- ⑤ 소득처분

문 24.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

- ①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타인의 건물과 교환한 경우
- ② 자신의 소유인 주택을 자녀에게 시가로 매도한 경우
- ③ 자기소유의 토지를 채무변제의 담보를 위하여 양도한 경우
- ④ 협의이혼의 위자료를 소유하고 있던 임야로 대물변제한 경우
- ⑤ 개인사업으로 영위하던 공장 건물과 토지를 법인에 현물 출자한 경우

문 25.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?

- 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하는 영업권의 양도
- ② 지적재산권의 양도
- ③ 전세권의 양도
- ④ 아파트당첨권의 양도
- ⑤ 골프회원권의 양도

문 26.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과세기간은 납세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
- ② 소득세는 국세이며 직접세이다
- ③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
- ④ 소득세는 분리과세·종합과세 또는 분류과세 중 하나의 방법으로 과세한다
- 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이다

문 27.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종합소득이 아닌 것은?(다만, 아래에 제시된 소득이 2001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)

- ① 연금소득
- ② 근로소득
- ③ 양도소득
- ④ 사업소득
- ⑤ 배당소득

문 28.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부동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
- ② 광업권자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
- ③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
- ④ 지상권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
- ⑤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

문 29.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
- ② 지급조서 제출의무
- ③ 부동산양도 신고의무
- ④ 사업장현황 신고의무
- ⑤ 지출증빙의 수취·보관의무

문 30.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이자소득은?

- ①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차익
- ② 공익신탁의 이익
- ③ 비영업대금의 이익
- ④ 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의 이익
- 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

- ① 납세담보물의 매각대금에서 징수하는 당해 담보된 국세는 다른 국세에 우선한다
- ②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징수하는 당해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법정기일 전에 당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지 못한다
-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임대차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징수하는 국세는 동법의 보호를 받는 임대차보증금의 일정액에 우선하지 못한다
- ④ 채납처분금액에서 징수하는 국세는 채납처분비에 우선하지 못한다
- ⑤ 경매에 의한 재산의 매각금액에서 징수하는 국세는 경매비용에 우선하지 못한다

- ① 평가방법의 무신고시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한다
- ② 개별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
- ③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
- ④ 지분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
- ⑤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

- ① 법인세
- ② 접대비
- ③ 지정기부금
- ④ 지급이자
- ⑤ 인건비

- ①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고가로 양도한 경우
- ②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로 양수한 경우
- ③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시가에 미달하는 임대료로 임대한 경우
- ④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한 경우
- ⑤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

- ① 이월익금
- ② 국세과오납금 환급금이자
- ③ 부가가치세 매출세액
- ④ 자산의 양도금액
- ⑤ 주식발행 액면초과액

- ①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이지만, 일정한 경우에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납세의무를 진다
- ② 내국법인은 무제한 납세의무자이며, 외국법인은 제한적 납세의무자이다
- ③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에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만하여 납세의무를 진다
- ④ 법인의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중 택일하여 납부하여야 한다
- ⑤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

- ① 수출하는 재화
- ②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
- ③ 항공기의 국외항행용역
-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외화획득재화·용역
-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·보험용역

- ① 법인사업자도 직전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일정규모 이하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
- ② 간이과세자는 직전 1억원의 공급대가가 4,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
- ③ 간이과세자도 채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영수증 대신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
- ④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
- ⑤ 특정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24만원 미만인 때에 이를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제도를 두고 있다

- ① 비사업자에 의한 재화의 공급
- ② 사업자에 의한 용역의 공급
- ③ 비사업자에 의한 용역의 공급
- ④ 사업자와 비사업자에 의한 용역의 수입
- ⑤ 사업자와 비사업자에 의한 재화의 수출

① 10/90 ② 5/105
③ 10/100 ④ 3/103
⑤ 10/110

제43회 사법시험 및 제15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시험

응시번호	
성명	

【 시험과목 】

제 2 선택	지적재산권법
--------	--------

문제책형
2

시험관리관확인

1 쪽

문 1. 우리나라 특허법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?

- ① 등록주의
- ② 심사주의
- ③ 선발명주의
- ④ 선원주의
- ⑤ 국어주의

문 2. 특허출원에 있어서 ‘선원의 판단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날에 한 2 이상의 출원이 있는 때에는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
- ②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한 2 이상의 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로 정해진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다
- ③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한 2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출원인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어느 누구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
- ④ 특허출원된 발명과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동일한 경우에는 특허출원한 자가 선원의 지위를 갖는다
- ⑤ 선원의 판단에 있어서 특허출원이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그 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

문 3. 특허법상의 기간에 대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의 청구 - 보정각하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
- ② 출원공개 - 특허출원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
- ③ 거절사정불복심판의 청구 - 거절사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
- ④ 이중출원 -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1년 3월 이내
- ⑤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- 특허출원일부터 5년 이내

문 4. 발명의 ‘실시’에 대하여 특허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행위가 아닌 것은?

- ① 수입
- ② 수출
- ③ 대여를 위한 전시
- ④ 양도
- ⑤ 대여의 청약

문 5. 특허법상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이 아닌 것은?

(다만, 이 경우 신규성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)

- ① 발명이 국내에서 동종업자 간에 알려진 경우
- ② 발명에 관련된 제품이 국내에서 판매된 경우
- ③ 발명이 학회지에 발표된 경우
- ④ 발명이 외국의 간행물에 기재된 경우
- ⑤ 발명에 관련된 제품이 외국에서 생산되어 그 나라의 백화점에 진열된 경우

문 6. 특허법상 직무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이 특허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
- ②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국유로 한다
- ③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사용자가 승계한 경우에도 종업원은 당연히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
- ④ 직무발명은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도 포함한다
- ⑤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예약승계의 특약을 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이다

문 7. 특허법상 출원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등록공고를 한 특허에 대하여도 출원공개가 행해진다
- ②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일부터 1년 6월이 경과 하기 전이라도 출원공개가 행해진다
- ③ 출원공개가 있으면 그 날부터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
- ④ 출원공개된 발명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보상금 청구권은 인정된다
- ⑤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권설정등록전에도 행사할 수 있다

문 8.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누구든지 특허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
- ② 특허이의신청은 등록공고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
- ③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유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
- ④ 특허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특허를 취소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
- ⑤ 특허이의신청은 3인의 심사관합의체가 심사·결정한다

문 9. 특허법상 법정실시권이 아닌 것은?

- ① 직무발명에 있어서 사용자의 실시권
- ② 선사용자의 실시권
- ③ 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원권리자의 실시권
- ④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
- ⑤ 국방상 필요에 의한 실시권

문 10. 특허법상 우선심사의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출원공개된 발명을 타인이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
- ②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
- ③ 에너지절약에 관련된 특허출원
-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
- ⑤ 특허출원인이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

문 11. 특허법상 국내우선권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이다
- ② 선출원이 포기된 경우 이를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은 불가능하다
- ③ 내국인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
- ④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선출원은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한한다
- ⑤ 우선권주장의 기초로 할 수 있는 발명은 선출원이 국내출원인 경우 그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이어야 한다

문 12. 특허권의 침해시 그 구제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현실적인 특허권의 침해는 없으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특허권자가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
- ② 특허권 침해죄는 친고죄이다
- ③ 특허권 침해에 대한 신용회복조치는 손해배상청구와 더불어 청구할 수 있다
- ④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
- ⑤ 특허권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

문 13. 특허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하나의 청구항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
- ②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
- ③ 구두심리를 원칙으로 한다
- ④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취지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
- ⑤ 심결이 확정등록되면 일사부재리의 효과가 발생한다

문 14. 특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 전에 출원된 타인의 의장권과 이용·저촉되는 경우 특허권자가 당해 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특허심판의 유형은?

- ①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
- ② 통상실시권허여심판
- ③ 거절사정불복심판
- ④ 취소결정불복심판
- ⑤ 특허무효심판

문 15. PCT(특허협력조약)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특허의 해외출원 절차를 통일화·간소화하기 위하여 체결된 조약이다
- ② 우리나라 특허청도 국제예비심사기관이다
- ③ 우리나라 특허청도 국제조사기관이다
- ④ 國語로는 출원할 수 없다
- ⑤ 하나의 출원으로 다수국에 출원할 수 있다

문 16. 실용신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실용신안법에서의 '고안'은 고도성을 요하지 아니한다
- ② 실용신안법은 물품에 대한 고안을 그 등록대상으로 한다
- ③ 물질을 제조하는 방법도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된다
- ④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
- ⑤ 실용신안법은 선등록제도를 취하고 있다

문 17. 기술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하여 누구든지 특허청장에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고안 또는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기술평가를 청구할 수 있다
- ②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
- ③ 출원계속중은 물론 실용신안권의 소멸후에도 기술평가를 청구할 수 있다
- ④ 실용신안권자는 반드시 기술평가청구를 하여야 한다
- ⑤ 기술평가에 대한 유지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

문 18. 다음 괄호 속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?

‘의장’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·모양·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()을 통하여 ()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.

- ① 시각 - 촉감
- ② 시각 - 미감
- ③ 촉각 - 미감
- ④ 오감 - 미감
- ⑤ 미각 - 촉감

문 19. 의장법이 채택하고 있지 않은 제도는?

- ① 국내우선권제도
- ② 비밀의장제도
- ③ 한 벌의 물품의 의장제도
- ④ 출원변경제도
- ⑤ 유사의장제도

문 20. 多意匠一出願制度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기본의장과 함께 그 기본의장에 속하는 유사의장을 함께 출원할 수 있다
- ② 다의장일출원은 이를 분할출원할 수 있다
- ③ 의장등록출원의 모든 출원을 다의장일출원으로 할 수 있다
- ④ 다의장일출원은 20 이내의 의장까지 할 수 있다
- ⑤ 다의장등록출원의 대상이 되는 의장은 동일물품 분류에 속해야 한다

문 21. 의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의장권은 그에 대한 질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포기가 가능하다
- ②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등록출원시에 발생한다
- ③ 의장법은 실용신안법과 같이 전품목에 대하여 무심사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
- ④ 무심사등록의장에 관한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기술평가를 받아야 한다
- ⑤ 의장이 등록출원 전에 외국에서 공연히 실시된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한다

문 26. 상표법상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오토바이 엔진소리는 독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
- ② 색채는 그 자체만으로는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
- ③ 상표등록출원을 서비스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
- ④ 상표법은 수요자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할 뿐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지는 아니한다
- ⑤ 현행 상표법상 연합상표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

문 27. 상표법상 업무표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?

- ① YMCA의 표장
- ② 적십자사의 표장
- ③ 보이스카웃의 표장
- ④ 올림픽조직위원회의 휘장
- ⑤ 축산물가공업동조합의 표장

문 28. 상표법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것은?

① 출원공고 ② 등록공고
③ 이의신청 ④ 무효심판
⑤ 분할출원

문 29. 저작인격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
- ②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
- ③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과반수 이상의 합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한다
- ④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
- ⑤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, 성명표시권, 동일성 유지권이 있다

문 30. 저작권법상의 期間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출판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처음 출판한 날부터 3년간 존속한다
- ②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異名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
- ③ 단체명의 저작물의 저작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
- ④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저작권은 최종부분의 공표시부터 50년간 존속한다
- ⑤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

문 31.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은?

- ① 법령
- ② 국가의 告示
- ③ 법원의 판결
- ④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
- ⑤ 사건현장을 촬영한 보도사진

문 32. 저작권법상 공익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?

- ① 저작재산권의 제한제도
- ② 법정허락제도
- ③ 공정이용의 법리
- ④ 출판권제도
- ⑤ 非保護著作物

문 33. 저작권법은 대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, 현행법상 대여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?

- ① 소설책
- ② 음악교본
- ③ 판매용음반
- ④ 그림
- ⑤ 사진

문 34. 저작권법에서 허용되고 있는 저작물의 자유이용 중 출처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는?

- ①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
- ② 시험문제로서의 복제
-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
- ④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
- ⑤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·녹화

문 35.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 중 그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?

- ① 입법 또는 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
- ② 공표된 저작물을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로 게재하는 경우
- ③ 공표된 저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
- ④ 학교의 입학시험에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
- ⑤ 앞을 못보는 사람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하는 경우

문 36. 저작권법 제43조 제1항은 “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이 배포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”고 규정하고 있다. 이는 다음 중 어떠한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?

- ① 공정이용(Fair Use)의 원칙
- ② 사적복제자유 원칙
- ③ 병행수입금지의 원칙
- ④ 최초판매이론(First Sale Doctrine)
- ⑤ 권리남용금지의 원칙

문 37.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저작권에 대하여는 등록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, 저작인접권에 대하여는 등록제도가 없다
- ② 저작인접권에 대하여도 질권의 설정이 가능하다
- ③ 음반제작자에게는 방송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
- ④ 音이 대한민국에서 맨 처음 고정된 음반은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
- ⑤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

문 38. 저작권법상 실연자에게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아닌 것은?

- ① 복제권
- ② 실연방송권
- ③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상금청구권
- ④ 전송권
- ⑤ 음반의 대여허락권

문 39. 2차적저작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토대로 만들어진 새로운 저작물이다
- ②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
- ③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에 대한 改變이 있으면 족하고 새로운 창작성이 있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
- ④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
- ⑤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저작재산권의 한 지분권이다

문 40. 현행 실정법에 따른 지적재산권 존속기간의 원칙에 관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특허권 -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
- ② 실용신안권 -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실용신안 등록출원일 후 10년
- ③ 저작재산권 -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
- ④ 상표권 -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
- ⑤ 의장권 - 의장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